

대만 중소기업 신화의 오해와 진실

2010.11.1 | 윤찬영_새사연 연구원 | media@saesayon.org

목 차

1. 대만 경제의 태동기
2. 대만 경제의 성장 과정
3. 대만의 IT·반도체 산업을 통해 본 중소기업 정책
4. 대만 경제에 대한 오해들
5. 결론을 대신해



<http://saesayon.org>

■ 요약문 ■

대만 경제는 어떤 성장 경로를 밟아왔기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일굴 수 있었으며, 흔들림 없이 고속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오랜 세월 대만 경제의 절반 이상을, 부문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국공영 부문이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대만 정부가 처음부터 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중소기업에 두었던 것도 아니다. 산업화 초기 국민당 정부의 관심은 국공영 부문을 키우는 데 있었고, 중소기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은 빨라야 1970년대 중반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만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영 부문은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끌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협력·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눈부시게 성장해왔다.

경제의 태동기에 대만의 중소기업이 폭넓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으로는, 우선 국민당 정부가 처음부터 국공영 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 자본의 지나친 집중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공영 부문이 비대하게 커지긴 했지만 적어도 그 밖의 영역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 자본끼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셈이다.

다음으로 대만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는 본성인의 상인근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창업정신, 또는 기업가정신과 맞닿아있는 사상·문화적 전통이다.

결국 대만 경제의 태동기에 이미 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했거나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들은 국가의 ‘관심’ 밖에서 보호도, 그렇다고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수출이라는 길을 개척하며 지난 수십년 간 대만 경제와 함께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의 IT·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이후 대만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 산업이자 대만 정부가 그 동안의 이른바 ‘온화한 산업 정책’을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개입에 나선 분야로 손꼽힌다.

1970년대 이후 대만 정부가 IT와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살펴보면, 후발 주자, 그것도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민간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R&D 투자에 나서 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확보한 뒤 이를 민간에 넘겨주는 방식을 택했다. 물론 첨단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대만의 IT·반도체 산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또 있다. 바로 중소기업들 사이의 분업과 협력 구조다. 반도체 공정은 보통 설계 → 제조 → 패키징 → 테스트 등의 네 단계를 밟게 되는데, 대만에서는 이 네 분야를 서로 다른 기업들이 맡아서 처리한다. 각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간의 철저한 분업 구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단단한 협력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중소기업이 좋은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 생태계가 좋은 중소기업을 만든다.’

여전히 중소기업들을 향해 혁신과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만을 주문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어쩌면 앞서 대만 경제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발견한 몇 가지 시사점들보다 이 한 마디가 더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른다. <요약문 끝>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유난히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에 한국의 상생 모델을 과시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다.

지난 9월 8일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필요할 때 도움 받아야 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겠지만 그것만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인식 전환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74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배울 수 있고 일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어 성공의 확률도 높다”면서 젊은이들을 타이르고 나섰다. 그리고 그 이틀 뒤인 29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을 상대로도 한 마디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나라의 기업 생태계를 바꾸는 일은 마치 노점상 없는 ‘보기 좋은’ 거리를 만드는 일처럼 큰 국제행사를 한두 달 앞두고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기업인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타이른다고 달라질 문제도 아니다. 게다가 대기업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상한 논리로 피해가니 더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우리는 흔히 대만을 꼽는다.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며 1950년대 이후 50여 년간 연평균 8% 안팎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대만은 외환위기의 파고가 동아시아를 휩쓴 1997년에도 4% 안팎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나라다. 2000년대 초반에는 대지진(1999.9)의 여파와 세계 IT산업의 위축으로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2001)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로 이른바 ‘차이완(Chiwan)’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만은 올해 1분기에 수출이 무려 42.1% 증가한 데 힘입어 13.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31년 만에 분기 최고 성장을 이뤄내기도 했다.

대체 대만 경제는 어떤 성장 경로를 밟아왔기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일굴 수 있었으며, 이처럼 흔들림 없이 고속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1. 대만 경제의 태동기

1) 우리가 모르는 대만 경제의 절반, 국공영 기업

대만 경제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기 위해서는 대만의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대만의 경제 구조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평탄치 않았던 이 나라의 역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만이라는 작은 섬의 근현대사는 한반도만큼이나 기구하다. 19세기 청일전쟁 뒤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영유권이 넘어갔다가,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중화민국의 작은 섬으로 잠시 돌아갔지만 4년 뒤 중국 본토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해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망명하면서 중화민국의 국토 그 자체가 돼버리고 말았다. 1949년 12월의 일이다.

1945~49년 일본의 패망에서 중화민국 건국으로 이어지는 대만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비정성시(悲情城市, A City Of Sadness, 1989)’에는 대만의 지식인들이 모여 “어차피 우리는 노예들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당시 대만 본성인(원주민)들과 본토 국민당 정부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50년간의 식민 지배 끝에 다시 맞닥뜨린 본토의 지배가 대만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1949년 이후에는 내전에서 패한 뒤 대륙에서 대만으로 대거 이주한 중국인(외성인)들과 본성인 사이의 갈등이 더해지게 된다.

중국 본토의 국민당 정부와 대만의 본성인, 또 내전에서 패배 뒤 대만으로 넘어와 함께 살게 된 외성인과 본성인 사이의 이러한 뿌리 깊은 갈등은 대만 경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공사(公私) 이중구조’를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공사 이중구조란, 대만의 경제 구조가 비대한 국공영 부문과 왜소한 민영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가리키는 용어다. 대만 정부는 한국과 달리 일본으로부터 몰수한 적산, 특히 기업들을 민간에 넘기지 않고 대부분 국유화했는데 그 배경에는 본성인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경계한 국민당 정부의 배제 전략이 숨어있었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제지, 시멘트, 농림, 광업 등 4개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가 장악한 뒤 1980년대까지 다양한 형태(국영, 성영, 시영, 군영, 당영, 퇴역군인회 사업 등)로 운영해왔다. 철강, 석유, 조선 등의 기간산업과 금융, 언론 등 핵심 서비스 산업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망라했으며, 그 결과 국공영 기업이 대만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초반에 60%에 달했다. 특히, 금융 부문의 경우는 국공영 금융기관의 비중이 무려 86.(1988~89년, 자기자본 기준)에 달할 정도로 비대했다. 대만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당국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다.

국공영 부문이 비대해진 배경에 손문의 삼민주의(민족·민권·민생주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 풍족한 삶을 중시한 민생주의의 영향으로 국민당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공 영역을 폭넓게 유지하는 한편, 민간 자본의 지나친 집중을 억제해왔다는 주장이다. 대만 경제가 전통적으로 성장보다는 ‘안정과 균형’에

무게를 두어 왔다는 점에서 삼민주주의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중소기업을 겨냥한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국민당 정부가 오랜 세월 권위주의 통치를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민생주의’만을 따로 떼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2) 대만을 아시아의 용으로 키운 힘, 중소기업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랜 세월 대만 경제의 절반 이상을, 부문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국공영 부문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대만 경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곤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분산 구조’는 절반쯤만 사실인 셈이다. 게다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대만 정부가 처음부터 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중소기업에 두었던 것도 아니다. 산업화 초기 국민당 정부의 관심은 국공영 부문을 키우는 데 있었고, 중소기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은 빨라야 1970년대 중반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 혹은 기업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대만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영 부문은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끌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협력·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눈부시게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의 태동기에 대만의 중소기업이 폭넓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국민당 정부가 처음부터 국공영 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 자본의 지나친 집중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공영 부문이 비대하게 커지긴 했지만 적어도 그 밖의 영역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 자본끼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셈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거대한 국공영 부문이 이미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나 대기업의 협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생존의 방식을 터득해갔다.

다음으로 대만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는 본성인의 상인근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창업정신, 또는 기업가정신과 맞닿아있는 사상·문화적 전통이다. 대만 본성인의 대부분은 명나라 말기에 중국 본토의 복건성·광둥성(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 일대에서 건너온 한족으로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상인정신이 강해 동남아 일대의 경제권을 장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 지역의 활발한 창업 흐름에서도 드러난다. 1960년대 대만 전

체 농가 가운데 경업농의 비중은 이미 절반이 넘는 52.4%에 달했으며, 1970년대에는 대만 공장의 60%, 생산총액의 44%, 종업원 수의 48%가 농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아직 대만 정부가 이렇다 할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기 전임을 생각하면 이는 대단히 큰 비중이다.

결국 대만 경제의 태동기에 이미 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했거나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들은 국가의 ‘관심’ 밖에서 보호도, 그렇다고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수출이라는 길을 개척하며 지난 수십년 간 대만 경제와 함께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태동기 이후 대만 경제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기로 하자.

2. 대만 경제의 성장 과정

1949년 이후 장개석의 국민당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화폐개혁과 토지개혁을 시작으로 대만 경제를 새롭게 일구기 시작한다. 화폐개혁은 중국 본토 경제와의 단절을 의미했고, 토지개혁은 봉건적 경제 구조와의 단절을 의미했다. 특히 토지개혁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대만 정부는 토지개혁을 통해 자작농을 늘려 농업생산량을 대폭 끌어올렸으며, 이는 농산품의 수출 증가로 이어져 향후 산업화의 재원으로 유용하게 쓰였다. 또한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대신해 일본으로부터 빼앗아 공기업화 한 4개 공기업(제지, 시멘트, 농림, 광업 등)의 주식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자본을 민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후 대만 정부는 1950년대를 시작으로 약 10년 단위로 단계별 산업 전략을 펼쳤다. 간략히 살펴보면, 첫 10년인 1950년대에는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 1960년대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전략 그리고 1980년대 이후는 ‘첨단 산업화’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수입대체 산업화기(1950년대)

대만 정부는 1953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실시했다. 내수시장을 겨냥한 경공업 부문의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던 전략으로 통상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추구했던 수입대체 산업화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미국의 무상원조가 산업화의 든든한 밑천으로 쓰였는데, 미국은 중국 본토를 장악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만을 전초기지로 삼고자 했다. 1951~60년의 10년 간 미국이 쏟아부은 자금은 무려 9억 2,000만 달러로 매년 대만 GNP의 10%에 달하는 규모를 거의 무상으로 지원한 셈이다.

이 시기에 대만 정부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환정책을 활용하긴 했으나,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다.

② 수출지향 산업화기(1960년대)

1960년대에 들어서자 수입대체 산업화는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1958년부터 미국이 그 동안 무상으로 지원해온 원조를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달러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으며, 국제 분업 구조에도 변화가 생겨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공업 생산에 힘을 쏟아야 했다.

대만 정부는 환율제를 수출에 유리한 단일환율제로 바꾸고 환율을 끌어내리는가 하면, 무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우대책을 도입하는 등 여러 법률과 제도를 손보며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1963~64년을 기점으로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30%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GNP성장률 역시 10%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한 전체 수출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산품을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특히 섬유, 시멘트, 합판, 플라스틱, 전기·전자제품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빠르게 늘었다. 이를 생산하는 곳이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었음은 물론이다.

③ 중화학공업화기(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탓에 ‘2차 수입대체 산업화’가 필요해졌다. 또한 국내의 임금 상승에 더해 72년의 석유 위기로 선진국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 하려는 전략을 세운다. 1973년부터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3개 중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에 나서는 한편, 교통, 운수,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 등 7개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된다. 1976년에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며 중소기업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선두 주자로 나서게 된다.

④ 첨단 산업화기(1980~90년대)

1970년대 말 선진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가운데 대만이 고속성장을 거듭하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만은 정보·전자·기계 산업 등을 3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 산업 구조를 한층 더 고도화하는 전략을 세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반도체, 정밀기계, 자동화 산업 등 ‘10대 심층산업 육성책’을 내놓는가 하면,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발표해 R&D(연구·개발)와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데 힘쓴다.

그 결과 비디오, 컴퓨터/주변기기, 반도체 등이 대만 경제를 이끄는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1980년 약 10억 달러이던 무역 흑자 규모가 1986년에는 16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1981년에 경제부 산하에 중소기업처를 설립한 데 이어, 1982년에는 ‘중소기업 융자 및 보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 10년에 걸쳐 총 조세수입의 10%에 달하는 3,051억 대만달러 규모의 조세를 감면하는가 하면, 연 2% 미만의 낮은 금리로 약 1,350억 대만 달러를 민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상으로 지난 50여 년간의 대만의 산업 정책을 조망해보았다. 간간히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들이 소개되긴 했지만 대만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특별한 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신흥개발국 모두가 비슷한 흐름을 띠는 산업 정책을 구사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만의 IT와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의 IT·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이후 대만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 산업이자 대만 정부가 그 동안의 이른바 ‘온화한 산업 정책’을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개입에 나선 분야로 손꼽힌다.

3. 대만의 IT·반도체 산업을 통해 본 중소기업 정책

“대만 없이는 미국 IT산업이 굴러가지 못한다.”(미국 비즈니스 위크, 2005)

결코 빈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저가형 단순조립가공이나 OEM 방식을 떠올려서도 안 된다. 대만의 IT와 반도체 분야 경쟁력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만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 분야는 단연 IT와 반도체다. 2008년 기준 대만의 10대 기업 가운데 9개가 제조업체이며, 이 가운데 7개가 전자 및 IT 관련 업체다. 대만 IT산업의 경쟁지수는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도 그에 못지않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GDP 기여도는 무려 10%(2009)에 달할 정도다.

대만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만 정부는 1973년 공업기술조사연구원(ITRI,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을 설립해 전자통신 부문에 대한 연구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곧 이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ITRI 산하에 EROS (Electronics Research Service Organization)를 설립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라는 민간 대기업이 한국반도체를 인수(1974)하며 반도체 산업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던 때였다.

미국에 기술 인력을 파견하는 등 몇 년 간의 노력 끝에 EROS가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인 웨이퍼(wafer) 시험생산에 성공하자 대만 정부는 민간 기업을 키우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펴낸다.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해 조세 감면, 수출보조금 및 연구개발비 지원책 등을 내놓으며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ITRI가 44%

분야에서 먼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TSMC 등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성장했다. 이에 대해 산은경제연구소의 <대만 반도체 산업 현황>이라는 보고서는 “대만은 종합반도체 업체보다는 팹리스·파운드리 업체가 발달하면서 전문적인 패키징·테스트 업체가 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논리에 따른 하청 관계에 익숙한 우리에게 대만 기업들 사이의 이러한 협력 구조가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이는 대만의 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공존의 법칙’이다.

대만의 기업 생태계가 힘의 논리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앞서 소개한 세계적인 두 회사인 UMC와 MediaTek은 하나의 회사였다가 1997년에 설계 분야를 담당하던 MediaTek이 떨어져 나와 독립한 경우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UMC가 가진 MediaTek의 지분이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만의 기업들은 서로 협력할 뿐 지배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4. 대만 경제에 대한 오해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인 1998년을 기준으로 한국 GDP에서 상위 1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5%에 달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대만은 그 1/3에도 못 미치는 19.6%였다. 그뿐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포철을 빼고는 9개 기업이 모두 민간 기업이지만, 대만은 1, 2위를 포함해 4개 기업이 국공영 기업이었다. 두 나라에서 민간 자본의 집중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국민경제에서 국공영 기업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산업화라는 여의주를 입에 물고 날아오르는 데 성공한 한국과 대만이라는 두 마리의 용이 지난 수십년 세월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를 짐작케 하는 통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한 뚜렷한 차이에도 ‘대체 대만은 어떻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일굴 수 있었을까’라는 처음의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민간 자본의 집중도’라는 하나의 척도만으로 하나의 국민경제 전체를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 오래 세월 민간 부문에서 자본의 집중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국공영 부문의 비중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비대할 정도로 높게 유지돼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대만 상업은행 총자산의 무려 64%를 차지하고 있던 3대 상업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뒤인 1998년의 일이었으며, 제조업 부문 공기업 122개 가운데 1997년 중반까지 민영화된 기업은 6개에 그쳤다.

다음으로, 경제 발전의 어느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특징이 반드시 분명한 경제 철학에 기반을 둔 산업 정책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대만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만 정부는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가 적산의 불하와 무상원조·차관의 분배 그리고 금융 지원에 있어 소수의 민간 기업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대만 경제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경제에서 민간 대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커지면서 중소기업이 누려온 위상은 무너지고 있다. 대만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던 비중은 1981년에 74.8%에 달했으나 그 이후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1995년에는 32.5%로, 다시 1998년에는 23.79%로 낮아졌다. 같은 해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76.2%에 달했다. 이제 대만 경제를 대표하는 것은 ‘기업집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계열화된 기업군들이다. 이들 100대 기업집단이 대만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1년 28.77%에서 1998년 53.88%로 높아졌다. 약 3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만의 대표 기업집단인 포모사 그룹은 자산 가치만 7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결론을 대신해

‘좋은 중소기업이 좋은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 생태계가 좋은 중소기업을 만든다.’

이 한 마디 말로 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여전히 중소기업들을 향해 혁신과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만을 주문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어쩌면 앞서 대만 경제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발견한 몇 가지 시사점들보다 이 한 마디가 더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른다.

끝으로, 대만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닮은 경제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20세기 중반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산업화에 나선 점이 그렇고, 그 뒤에도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으로 시작해 ‘수출’에 눈을 돌리면서 ‘중화학공업화’에 이어 ‘첨단 산업화’ 전략에 성공해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어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글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대만에 ‘양안 문제’라는 풀기 힘든 역사의 숙제가 남아있다면 한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어쩌면 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으며, 대만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랜 권위주의 통치기를 지나오기도 했다.

이렇듯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우리와 가장 닮은 나라라 할 수 있는 대만에

대해 그 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아마도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그리고 그 결과 대만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대체로 ‘너무 다르다’는 것으로 모아져 결국 대만으로부터는 ‘배울 것이 없다’, 또는 ‘배울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그 보다 훨씬 더 ‘너무 다른’ 선진국 경제들을 대하는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이 서로 상생·공존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화두로 제시된 오늘 우리에게 대만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민호, 「한국, 대만, 일본의 산업정책과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
- 김준, 「대만 경제의 특성과 장개석·장경국」
- 오동윤(2001), 「대만 경제 침체와 시사점」
- 윤상우(2003), 「대만 경제성장모델의 신화」
- 이윤찬, ‘세계 휩쓰는 대만 IT의 경쟁력은’(이코노미스트, 2010.6.22)
- 임성학, 「한국, 대만의 경제발전과 전통사상」
- 윤상우(2004), 「중국·대만의 경제통합과 대만 성장모델」
- 정명기(2002.4), 「대만 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
- 홍지승(2003), 「대만의 신산업정책과 시사점」